

## 韓國大學의 구조적 모순과 自律權

국어사전을 보면 구조란 ‘꾸미어 만듦’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 꾸미어 만들었는지 한국의 대학은 계속 이 나라의 짐이 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세상 다른 나라의 대학들도 가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우리의 대학처럼 救濟不能의 인상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누가 꾸미어 만들었기에 이렇게 구제불능이 되었는가?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교육열을 이유로 교육에 관하여 잘 하지도 못하던데 완전 독점을 하여 왔다. 그 잘못을 알기에 정부도 거의 10년이 넘게 대학의 자율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학의 자율화는 실현되지 않고 걱정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분명히 大學의 構造的 矛盾을 고치려면 우리의 대학을 우리 대학 스스로가 꾸미어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 프랑크 후터는 그의 판결문에서 대학은 네 가지 본질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첫째는 누가 가르칠 것인가? 둘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넷째는 누구를 입학시킬 것인가? 대학은 자기 스스로 이 네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이른바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네 가지의 自律權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자율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있으며, 아무렇게나 행사하여 사회나 국가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 가지의 자율권을 갖지 못한 대학들은 책임있게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 대학의 짧은 역사를 보면 대학이 네 가지의 자율권을 책임있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율권을 빼앗긴 것 같다. 임시부정과 같은 사건으로 사회와 국가는 대학의 자율권을 서서히 침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대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율권을 주어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권이 주어지는 것에 겁을 먹는 것 같기도 하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태평양시대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하루속히 우리의 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대학이 없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국제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려면 대학의 네 가지 자율권을 대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도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 대학인 스스로 이 네 가지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민



延世大 總長 宋 梓

주화와 자유화라는 구호 아래 교수나 직원, 학생들이 대학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책임있게 네 가지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면 공부하면서 평가받아야 졸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敎職員도 評價를 받아야 한다. 교직원도 평가를 받아서 학교에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날에 정치적으로 교수의 임명절차가 이용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교수의 책임명 절차 같은 것은 대학이 절대로 말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학문풍토는 어지럽게 될 것이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직원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틀림없는 금언이다.

둘째로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가지는 대학에 대한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성인이 되면 모두가 똑같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가지는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지 학교를 다스리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며 자기 학문분야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지 재단의 교육이념이나 행정방침을 관여하고 결정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에 대한 권한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에 주어진 네 가지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자율권을 조급하게 행사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직으로 낙인 찍혀 국가나 사회가 계속하여 우리 대학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이 네 가지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잘 선택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선택이 아니라 制限的 選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과 자율권의 문제가 순리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대학의 전망은 결코 밝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대학의 발전이 없이는 신한국의 건설도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